

	<h1>보도자료</h1>	2022. 1. 5.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39 -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 리겠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공약 발표**

- 노령연금, 일하면 깎이는 구조... 노년 삶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 함께 꺾어
-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으로 노년층의 안정적 생활 운영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노년층이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는 주요 재원이다.

이재명 후보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며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금이 삭감 지급된다. 2021년 기준, 월 소득 2,539,734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삭감 대상이 된다. 부족한 생활자금 충당 등의 이유로 노동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비례해 62세부터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된다. 작년 기준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소득을 이유로 삭감된 연금을 받았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령연금 삭감 지급이)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과 연금을 연계해 삭감하는 현행 제도가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꾸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현행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불합리 지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이른바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감액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 폐지하는 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 예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인들의 소득 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동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삭감해왔다. 2020년 기준 한 번이라도 연금이 삭감된 인원은 93,197명으로, 평균 1인당 142만원 규모다. 월소득이 약 254만원을 넘으면 연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게는 10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 삭감되며, 62세부터 66세까지 5년간 적용된다.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은 2000년, 영국은 1989년, 프랑스는 2008년에 관련 제도를 폐지했고, OECD도 1998년에 고령화 시대 노인 근로 증진을 위해 삭감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참고자료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 현재 「국민연금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국민연금법 63조의2)
- 이로 인해 62세 이상(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67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인 약253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2021년 2,539,734원)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월급여기준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3,502,629원 초과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4,581,299원 이상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5,633,930원 이상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6,686,562원 이상
400만원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이상	7,739,193원 이상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현황 (단위: 명, 천원)

초과소득월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100만원 미만	31,935 (5,771,150)	32,632 (7,359,022)	43,186 (8,334,482)	45,207 (8,690,257)	46,916 (7,737,48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792 (10,613,301)	12,568 (13,159,569)	17,203 (15,123,506)	19,051 (16,609,574)	20,246 (13,925,41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290 (11,479,230)	6,131 (14,016,437)	8,670 (16,724,425)	8,929 (18,206,372)	9,707 (14,982,43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474 (9,713,077)	3,515 (12,359,122)	4,965 (14,964,022)	4,931 (16,315,306)	5,261 (13,420,007)
400만원 이상	10,564 (39,346,826)	10,496 (49,832,341)	15,315 (64,313,515)	15,079 (72,320,362)	17,079 (65,562,340)
합계	65,055 (76,923,584)	65,342 (96,726,491)	89,339 (119,459,950)	93,197 (132,141,871)	99,209 (115,627,685)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사례

- 실제로 54년생 C모씨는 23년 8개월(284개월)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매월 약 96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2019년 5월부터 매월 약30만원씩 총 613만원이 감액됨
- 또한 56년생 D모씨도 24년 5개월(29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매월 약 14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6월부터 약 50만원씩 총 1,260만원이 감액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사례 <2020년 기준 각 구간별 감액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 (단위: 원)

초과소득월액	성명	연생	납부개월	실제 월소득액	기본 연금월액	실지급연금월액 (감액시작연월)	감액금액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 총액
100만원미만	A씨	57년생	204개월	348만원	599,259	549,290 (2019.8)	49,966	890,257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B씨	57년생	175개월	443만원	406,859	256,920 (2019.12)	149,932	1,843,584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C씨	54년생	284개월	543만원	961,173	661,200 (2019.5)	299,973	6,130,605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D씨	56년생	293개월	643만원	1,457,617	957,850 (2017.6)	499,764	12,600,527
400만원이상	E씨	58년생	392개월	3,197만원	2,037,388	1,018,690 (2020.9)	1,018,694	4,074,777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에 불과

□ OECD 주요국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소득심사제도 운영 현황

소득제한 없음(17개국)	소득제한 있음(4개국)	확인불가(4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피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스, 일본, 한국, 스페인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 대책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건

- 최혜영의원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 하도록 함(20.08.31.)

<※비용추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6,750억원, 연평균1,350억원>

- 김성주의원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함(21.06.24.)

<※비용추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878억원, 연평균176억원>

**Q. 소득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나요?**

-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있음.  
국회에서의 법안논의를 통해 결정
- [최혜영의원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  
<※비용추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6,750억원, 연평균1,350억원>
- [김성주의원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함.  
<※비용추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878억원, 연평균176억원>

**Q. 과잉보장을 막기 위해 월254만원 이상 소득자는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월평균 국민연금이 54만원임.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생활비(130만원)의 절반도 안됨. 실제 감액된 사례를 보면 절반 이상은 월평균 수급액이 100만원 이하임. 먹고 살기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데 연금을 깎는 것은 과도함.

**Q. 감액을 폐지하면 기금고갈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 2020년 소득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총감액은 1,321억원으로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입액 약 123조원(보험료수입 51조원, 운용수익 72조원 등)의 0.1%, 지급된 연금보험료 약 25조원의 0.5% 수준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